제67권(2010. 12. 28)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요　약 ····· 1
1. 머리말 ····· 3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 4
3.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평가와 수요 ····· 12
4.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참여도 ····· 16
5.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노후대책 ····· 22
6. 시사점 ·····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동원** 부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이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다. 2010년 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국민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도시민 1,500명, 농업인 816명, 전문가 64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380건을 분석하였다.

도시민 88.4%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민 40%만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소 농업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도시민은 10명 중 3명(30.7%)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도시민은 55.9%로 최근 3년새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59.7%가 찬성하여 최근 3년새 증가 추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34%로 나타났으며, 만족 요인은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48%), '좋은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23%) 등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은 '생산비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올해 농사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하였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가는 91%에 달하였다.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 도시민 40.6%, 농업인 22.8%가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10년 후 한국농업을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전문가(42.2%), 도시민(29.9%), 농업인(25.5%)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분야로 평가하였다. 2011년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업인과 전문가는 ‘소득안정’, ‘유통개혁’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재고쌀 해소 대책으로 ‘쌀소비 촉진과 가공용 공급확대’(도시민 60.9%, 농업인 38%, 전문가 34.4%)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지난 9월 발표한 수확기 쌀값 및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40.1%, 농업인 44.0%, 전문가 36%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도시민은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을 꼽았으며,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1.7%로 이 중 53.2%가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 ‘숙박과 취사 불편’(28.3%)을 꼽았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은 47.7%로 4년새 23.6%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30.1%)을 가장 많이 꼽아 경제적 기반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인식에서는 ‘한우’가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쌀’(75.8%), ‘돼지고기’(68.0%), ‘과일’(61.6%) 순이었다. 식품 구매 시 채소는 ‘안전성’,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주거환경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 격차는 2006년 13.8%p에서 2010년 18.7%p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 만족도도 도시민과 농업인 격차가 지난해 7.5%p에서 2010년 14.3%p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인 중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나타났고, 사회보장제도에 전적으로 기대거나(6.6%)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12.0%) 취약계층도 18.6%로 조사되었다. 농업인들의 노후대책에 수준은 매우 또는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7.7%에 그쳤다.

1. 머리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 파악과 정책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할 목적으로 매년 말 대국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도시민은 면접조사, 농업인과 전문가는 우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국민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도시민 1,500명, 농업인 816명, 전문가 64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380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농업정책 수요, 농업·농촌환경변화에 대한 의식과 소비패턴 변화, 주거환경과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이며 이 속보에서는 주요 결과만을 발표하고, 총괄적인 보고서는 추후 별도 발간할 예정이다.

<표본 선정과 응답자 현황>

○ **도시민(면접 1,500명)**: 전국 읍·면단위 이상 18개 광역시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 1:1 방문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5%p>

○ **농업인(응답자 816명)**: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1,950명 대상 우편 조사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

○ **전문가(응답자 64명)**: 농업계 및 비농업계 학자와 연구자 351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64명)의 75%가 농업계 전문가로 분류됨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하였고, 2009년에 전문가 그룹을 추가하였다. 현안에 대한 연구활용 목적과 과거 조사와의 비교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일반여론조사와 패널조사를 병행하였다.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2.1. 도시민 10명 중 3명만 “농업·농촌 문제 관심있다”

도시민 88.4%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중요성 인식은 높은 편이나, 도시민 40%만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관련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도시민 10명 중 3명(30.7%)에 그치고 있어 농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관심층’의 경우 20대(53.8%), 학생(52.6%) 층으로 집계되었고, 40대 이상 연령층과 낮은 소득 계층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 도시민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

단위: %

		관심층	보통층	무관심층			관심층	보통층	무관심층
전체		30.7	37.1	32.3	전체		30.7	37.1	32.3
성별	남자	33.3	37.5	29.2	소득별	150만 원 미만	42.6	34.8	22.6
	여자	28.1	36.7	35.2		150~250미만	40.2	32.1	27.7
연령별	19~29세	11.7	34.5	53.8		250~350미만	29.6	36.9	33.5
	30대	20.7	42.4	36.8		350~450미만	25.5	39.0	35.6
	40대	36.9	39.9	23.2		450만 원 이상	26.5	39.3	34.2
	50대	38.5	33.8	27.7	직업별	자영업	39.7	33.3	27.0
	60세 이상	46.4	33.3	20.3		블루칼라	29.8	37.2	32.9
지역	특/광역시	33.0	37.4	29.7		화이트칼라	26.2	40.5	33.2
	중소도시	28.7	36.8	34.5		전업주부	30.7	37.2	32.1
학력별	중졸 이하	47.8	27.5	24.7		학생	10.3	37.1	52.6
	고졸	31.1	36.7	32.1		무직/기타	47.9	33.3	18.8
	대재 이상	22.4	41.7	35.9					

2.2. “우리농업 발전가능성 있다” 4년 전 비해 17.6%p 증가한 53.4%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종합적인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문항을 활용해 질문한 결과, ‘초·중·고 교과 과정에 농업·농촌 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80.9%),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80.5%),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83.7%),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80.1%),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80.1%)에 대한 동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40.9%),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47.6%),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30%)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우리농업의 발전 가능성(2007년 35.8% → 2010년 53.4%), 국제경쟁력이 있다(2007년 35.2% → 2010년 47.6%)에 동의하는 비율이 4년째 상승했으며, 반면 농업투자 축소에 동의하는 비율도 해마다 상승해 2007년 16% → 2010년 3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2. 농업·농촌관련 의견들에 대한 동의 비율(도시민)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73.9	73.9	87.4	80.9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79.1	85.9	82.9	71.2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5.7	47.9	43.4	40.9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79.1	83.0	79.7	80.5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5.8	40.4	50.2	53.4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	35.2	39.0	46.3	47.6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63.0	68.6	71.3	66.5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86.5	86.7	88.5	83.7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16.0	18.2	22.4	30.0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49.5	54.2	52.3	53.3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77.7	82.1	79.5	80.1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	92.6	88.4	80.1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	-	61.1	65.6
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형 위주의 농업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	-	77.3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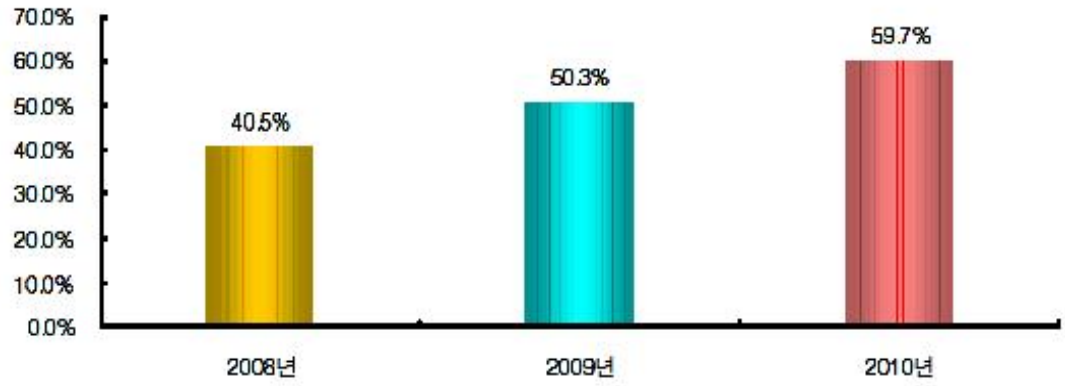
2.3.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에 대한 세금 추가부담 찬성율 59.7%로 상승세

농업·농촌의 기본적인 농산물 생산 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자연환경 보호, 전통유지 등 다원적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는 도시민은 응답자의 55.9%로 최근 3년새 감소 추세(2008년 63.5%, 2009년 58.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도시민 응답자 59.7%가 찬성하여 2008년 조사결과보다 19.2%p 증가하는 등 최근 3년새 지지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금 추가부담 의향은 50대와 자영업층,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서 찬성 의견이 더욱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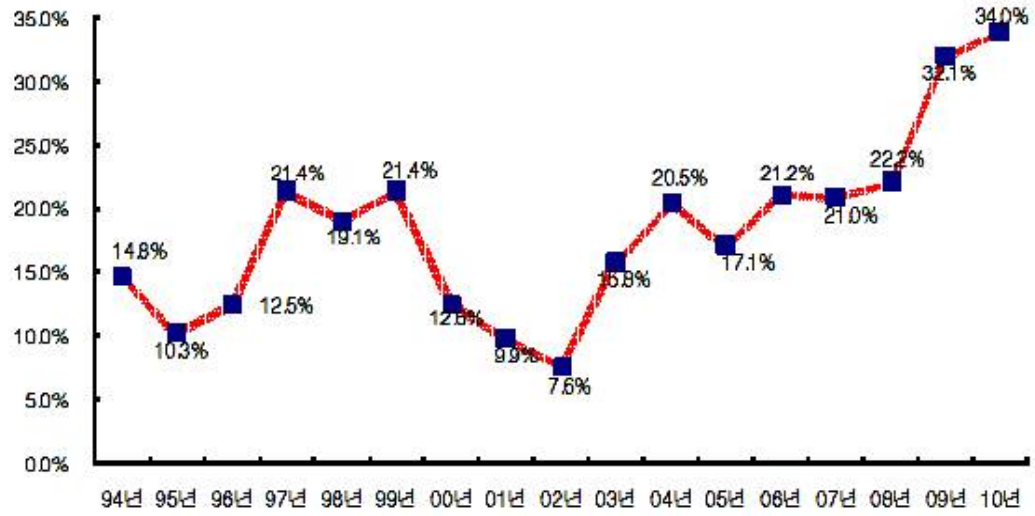
그림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찬성(도시민)



2.4. 농업인 "정년없이 일할 수 있어 좋다" 직업만족도 34%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2009년 처음으로 만족도가 30%대를 넘은 이후 이번 2010년도 조사에서도 34%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농업인 직업만족도 변화



만족 요인으로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48%), '좋은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23%), '도시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17.4%) 등으로 조사되어 조기퇴직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근로자 직업환경이 농업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47.9%),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8.2%),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5.2%),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14.8%) 등으로 나타났다.

2.5. 농업인의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소폭 감소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는 23.3%로 지난해보다는 2.3%p 낮아졌다. 하지만 2006년 16.5%, 2008년 22.7%였던 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는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촌생활 불만족 요인으로는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 열악'(35.6%), '의료시설 등 복지 미흡'(22.8%) 등이 불만족 요인의 과반수를 넘을 만큼 절대적인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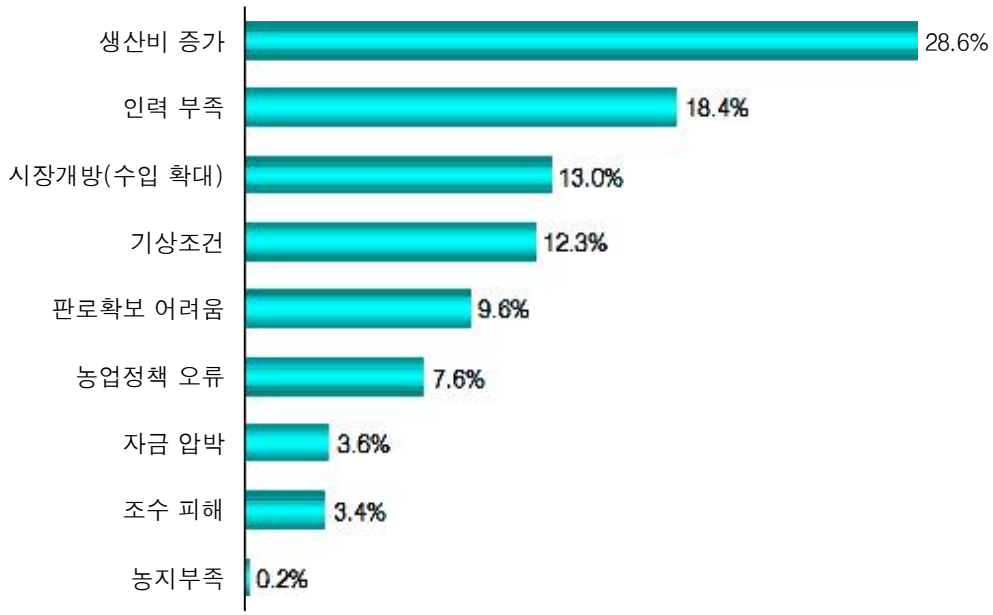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한다	10	1.2	21	3.2	29	3.2	20	2.5
약간 만족한다	131	15.3	130	19.5	203	22.4	170	20.8
그저 그렇다	348	40.6	266	39.9	346	38.2	313	38.4
약간 불만이다	272	31.7	162	24.3	239	26.4	231	28.3
매우 불만이다	87	10.2	83	12.5	75	8.3	81	9.9
모름/무응답	9	1.1	4	0.6	14	1.6	1	0.1
합계	857	100.0	666	100.0	906	100.0	816	100.0

2.6. 농가 경영위협 요인 '생산비 증가', '인력부족' 순 꼽아

농가의 가장 큰 경영위협 요인으로 농업인들은 '생산비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인력 부족', '시장개방(수입), '기상조건'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 농가 경영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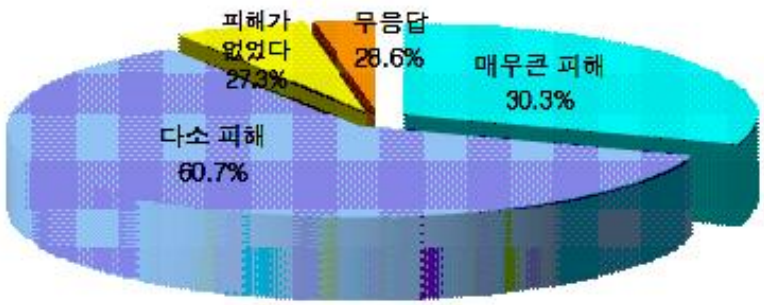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올해 농사만족도는 지난해(29.1%)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하였다.

- 불만족 요인으로는 '소득감소'(44.5%), '나빠진 농사여건'(30.0%), '농산물 수입 증가'(10.8%)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2.7. 농가 91% "이상 기후로 올 농사 피해봤다"

올해 급격한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가는 응답자의 91%로 이 중 30.3%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 피해 여부



농가에서 급격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도'를 가장 많이(44.8%)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사후적인 위험관리 강화'(23.6%), '중장기 변화관리와 위험관리 강화'(15.4%)를 꼽았다.

2.8. 농업·농촌 역할로 '자연환경보전' 기능 중요성 부각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는 현재나 미래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세 그룹 모두 현재나 미래 모두 '자연환경 보전'을 꼽았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이 뒤를 이었다.

2006년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도시민의 경우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다음으로 ‘국토균형발전’(24.3%) 기능이 ‘자연환경보전’(10.9%) 기능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나, 2010년에는 ‘국토균형발전’(15.7%) 기능이 ‘자연환경보전’(23.0%) 기능에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표 4.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 역할 인식

단위: %

구 분	2006년				2010년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42.3	36.1	40.7	35.4	42.4	42.0	42.9	23.8	47.7	40.6
국토의 균형발전	24.3	22.8	17.7	16.5	15.7	13.1	16.1	14.1	19.5	17.2
자연환경 보전	10.9	13.7	27.1	25.6	23.0	16.6	25.5	19.7	25.8	22.7
전통문화의 계승	10.8	11.4	3.6	5.3	8.4	12.3	4.5	9.0	-	3.1
관광 및 휴식의 장소	7.2	8.0	3.7	6.4	3.7	9.5	3.4	14.9	1.6	7.0
전원생활의 공간	4.4	7.8	5.8	7.8	6.6	6.4	7.7	18.3	3.1	7.0
기타	0.1	0.1	0.2	0.4	0.1	0.1	-	0.1	-	-
모름/무응답	-	-	1.6	2.7	0.1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 10년 후 농촌생활에 긍정 전망은 2년전 비해 10%대 증가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 도시민 40.6%, 농업인 22.8%가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같은 전망은 2008년 본 조사결과보다 각 10.8%p, 6.8%p 긍정적인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희망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의 인식이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5.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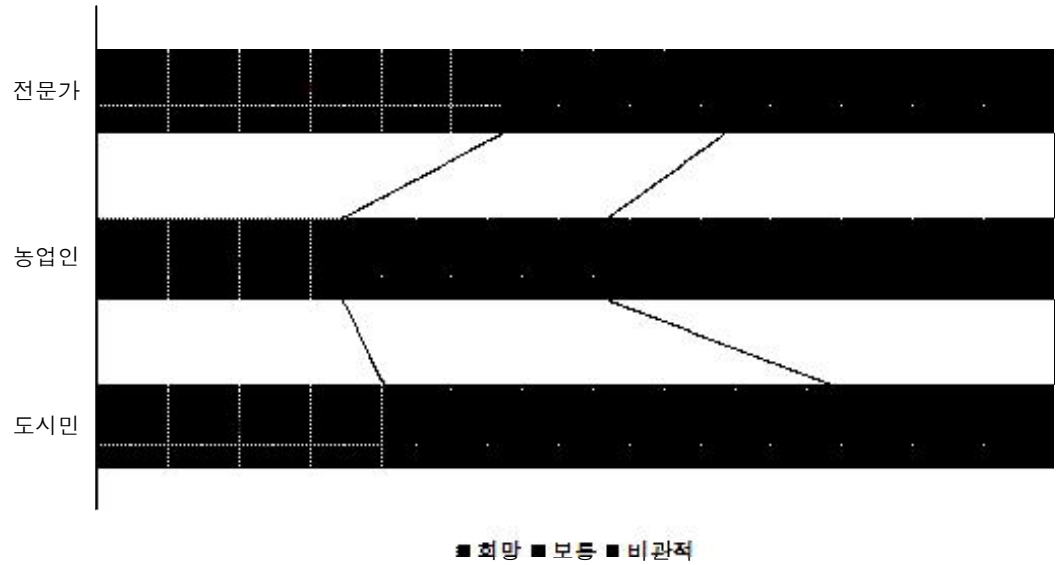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8년		2010년	
	도시민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8.3	9.9	1.3	4.5	2.0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25.2	19.5	16.7	36.1	22.8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27.0	26.1	26.6	32.6	26.4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32.3	33.9	40.1	20.6	38.0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7.2	10.5	14.4	6.2	10.7
모름/무응답	0.1	-	0.9	-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10. '10년 후 한국농업 희망적' 전문가 42.2%, 농업인 25.5%

10년 후 한국농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전문가[2], 도시민, 농업인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와 농업인 인식이 16.7%p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5. 향후 10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2) 200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처음 도입한 전문가 조사는 회수률이 낮고(16.8%) 응답 전문가의 21.9%가 비농업계 전문가라는 점을 조사결과 해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평가와 수요

3.1. 2010년 농정현안 중 '식품산업 육성' 가장 큰 성과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분야로 평가하였다.

표 6. 2010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조치에 대한 평가

단위: %

문항	성과가 있음		그저 그렇다		성과가 없음	
	농업인	전문가	농업인	전문가	농업인	전문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19.5	10.9	33.5	34.4	35.3	54.6
쌀 재고 증가 및 가격 하락 대책	5.5	9.4	16.4	25.0	67.0	65.6
한-미, 한-중, 한-EU FTA 대응	15.1	17.2	36.8	46.9	34.9	35.9
한식 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30.3	46.9	37.6	39.1	18.9	14.1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13.4	14.1	45.2	46.9	27.6	39.1
농식품 수출 확대	27.0	37.5	32.8	43.7	26.7	18.6
농산물 수급(채소류)안정 대책	13.4	7.8	23.5	39.1	50.7	53.1

3.2. 2011년 중점추진 정책 분야로 '소득안정' 꼽아

2011년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업인과 전문가는 '소득안정'과 '유통개혁'을 공통으로 꼽았으며, 이 밖에 '쌀산업종합대책'과 'FTA 대응', '농협개혁' 등을 주문하였다.

반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 개발', '한식세계화' 등은 관심도가 낮은 분야로 집계되어 이같은 현장수요자의 수요를 정책수립에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2011년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중복)

단위: %

구 분	농업인	전문가
쌀산업 종합대책	18.1	9.4
한-EU, 한-중 FTA 대응	8.7	18.1
유통개혁 등 농산물값 안정대책	25.0	21.3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28.4	22.8
농업협동조합 개혁 마무리	6.7	11.0
농어촌 복지 확대	6.0	5.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2.4	3.9
귀농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2.2	4.7
한식 세계화 등 식품정책	1.8	1.6
해외농업 개발	0.6	1.6
기타	0.1	1.6
합계	100.0	100.0

3.3. 중장기 농업·농촌 유지 위해 '소득안정과' '후계인력 육성'

중장기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농가소득안정'(각 43.8%, 53.8%)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민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14.3%)을, 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육성'(13.6%)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후계농업인 육성'(25.0%)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각각 21.9%로 중요하게 꼽았다.

표 8.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

단위: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후계농업인 육성	11.5	13.6	25.0
농가소득 안정	43.8	53.8	21.9
적극적인 귀농지원	9.8	3.4	1.6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확대	11.9	5.8	6.3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14.3	12.3	21.9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6.5	6.0	12.5
외부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1.7	3.8	7.8
기타/모름/무응답	0.5	1.4	3.1
합계	100.0	100.0	100.0

3.4. 재고쌀 해소 대책으로 '쌀 소비촉진과 가공용 공급확대' 꼽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고쌀 문제 해소 대책으로 국민들은 '쌀소비 촉진과 가공용 공급 확대'(도시민 60.9%, 농업인 38%, 전문가 34.4%)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농업인과 전문가는 '사료작물 등 작목전환을 유도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 31.7%, 23.4%로 높게 나타나 쌀 재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재고쌀 문제 해소대책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사료작물 등 작목전환 유도해 생산량 조절	15.1	31.7	23.4
쌀 소비촉진과 가공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조절	60.9	38.0	34.4
쌀 조기 관세화 수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	14.1	7.5	23.4
대북 지원 등 원조용으로 소진	9.5	19.1	17.2
기타/ 모름/무응답	0.4	3.7	1.6
합계	100.0	100.0	100.0

이와 관련하여, 재고쌀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룹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해 찬성은 도시민 22.7%, 농업인 32.5%, 전문가 51.6%로 나타났고, 반대는 도시민이 39.3%, 농업인과 전문가가 각 10.1%, 14.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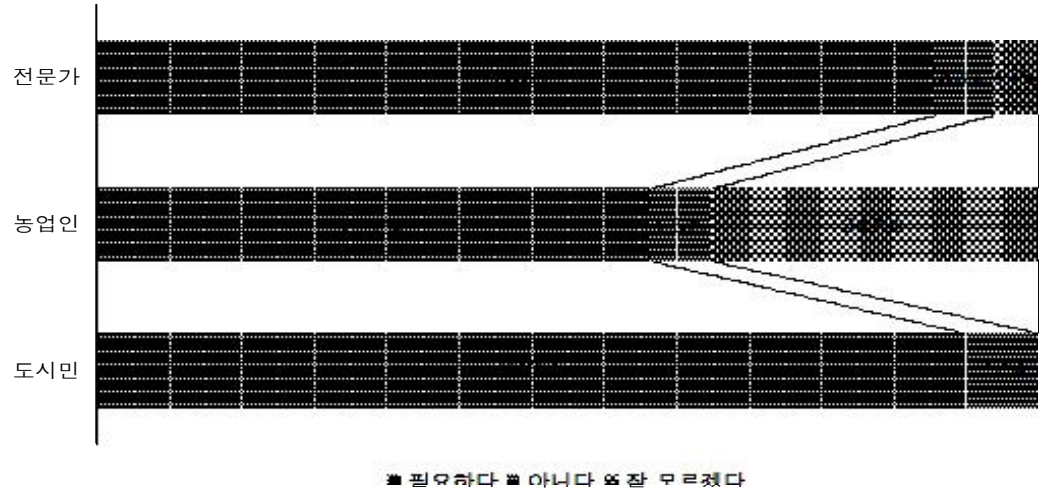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수확기 쌀값 및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40.1%, 농업인 44%, 전문가 36%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평가는 긍정평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5. 농업부문 '녹색성장' 농업인 인식 상대적 부족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도시민 92.3%, 전문가 89.6%, 농업인 58.7%로 나타나 도시민과

전문가에 비해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다. 특히, 농업인 그룹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3%에 달해 녹색성장의 영향 등에 대한 인지와 인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의 필요성 인식



3.6.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 농업에 미칠 영향 '긍정' 전망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나라 미래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77.4%), 전문가(76.6%), 농업인(64.1%)으로 나타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그렇지만 농업인 계층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0. '녹색성장' 정책 우리나라의 미래농업 발전에 미칠 기여도 인식

단위: %

구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매우 크게 기여할 것	13.7	14.3	21.9
어느 정도 기여할 것	63.7	49.8	54.7
보통	16.3	16.1	15.6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5.4	13.2	6.3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0.8	0.9	1.6
무응답/모름	-	5.8	-
합계	100.0	100.0	100.0

4.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참여도

4.1. '안전식품'과 '농산물 가격' 정책에 관심 집중

도시민은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을 꼽아 농산물 소비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

반면, '한식세계화', '농지규제 완화', '농촌관광', '귀농·귀촌정책', '농업·농촌환경' 등 도시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도시민)

4.2. 1년간 1회 이상 농촌관광 경험 21.7%, 만족도 53.2%

도시민 중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1.7%에 그쳤으며, 이 중 53.2%가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여 2007년 조

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도시민들은 농촌관광 불만족 요인으로 '숙박과 취사 불편', '체험활동 부족' 순으로 꼽았으며, 체험하고 싶은 농촌활동은 '주말농장', '테마마을 체험', '지역축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농촌관광의 만족도(도시민)

단위: %

구 분	2007년	2010년
매우 만족	5.0	1.2
대체로 만족	40.9	52.0
보통	43.4	40.0
대체로 불만	9.1	6.2
매우 불만	1.6	0.5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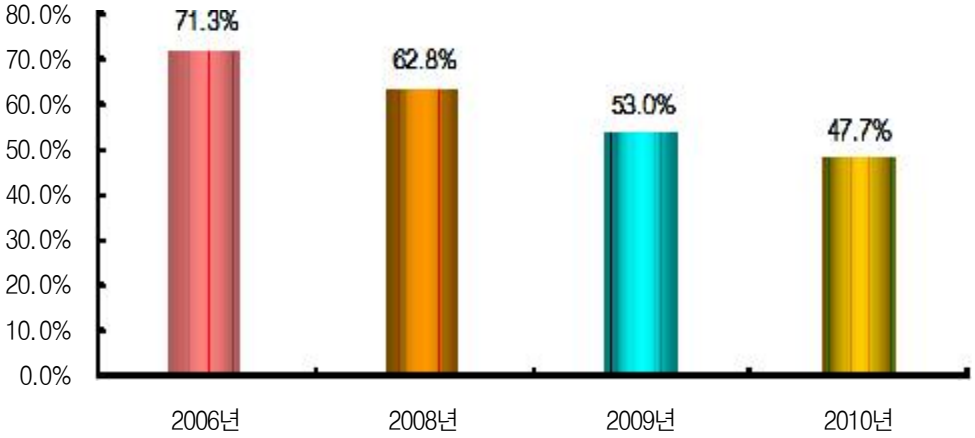
4.3.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4년새 23.6%p 감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2006년 71.3%에서 매년 줄어 이번 조사에서는 47.7%로 나타나 귀농·귀촌 의향이 4년새 23.6%p나 감소하였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귀촌·귀농 의향이 '없다'는 의향은 젊은층과 주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 '있다'는 의향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자영업 및 무직/기타(66.7%)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 시기에 대해서는 62%의 응답자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년 이후'(17.9%), '10년 내'(13.7%), '5년 내'(5.0%), '3년 내'(1.4%) 순으로 나타나 단기간 내 귀농을 실천하려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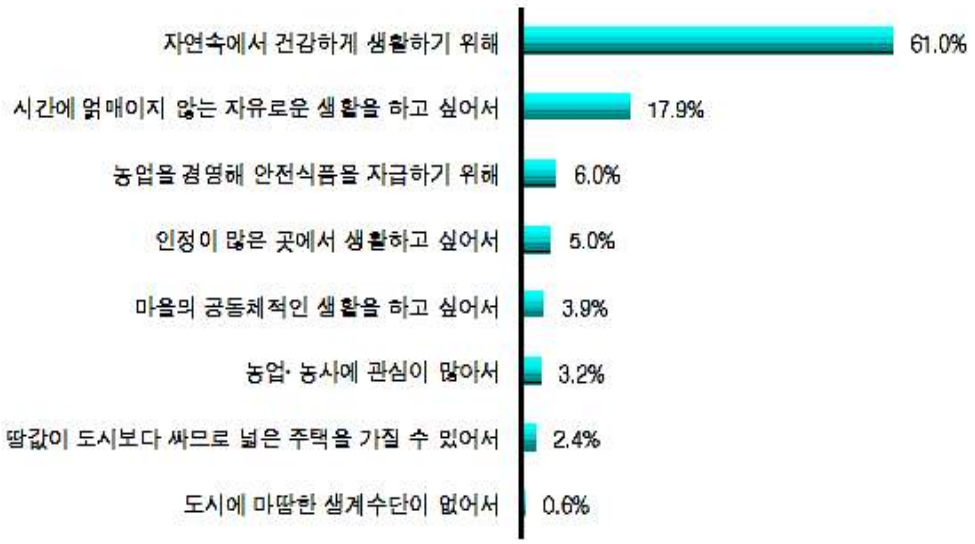
그림 8.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



4.4. 귀농·귀촌 이유로 61%가 '건강'을 고려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꼽은 의견이 6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7.9%)가 꼽혀 주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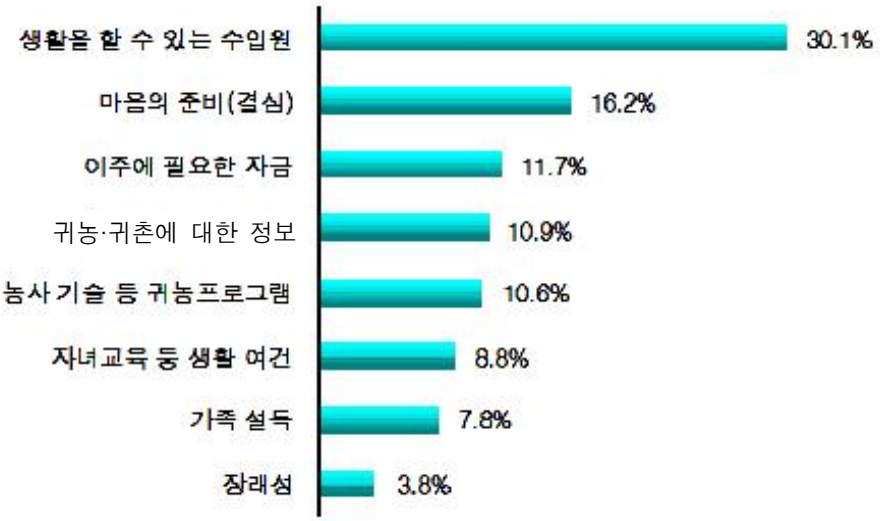
그림 9.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30.1%)이 가장 많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음의 준비'(16.2%), '이주에 필요한 자금'(11.7%),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10.9%), '농사 기술 등 귀농 프로그램'(10.6%) 등의 순이었다.

그림 10.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



4.5. 국산농산물 경쟁력 '한우-쌀-돼지고기-과일-화훼' 순 인식

도시민들은 국산 농축산물 5개 품목의 수입산 대비 가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력에 대해, '한우'(매우 높다 39.5% + 높은 편 39.3%)의 경쟁력이 7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9.5%로 타 항목에 비해 월등하였다.

다음으로 '쌀'(75.8%), '돼지고기'(68.0%), '과일'(61.6%) 순이었으며, '화훼'의 경우 45.9%로 항목 중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2. 국산농축산물의 경쟁력 인식 정도

단위: %

문 항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쌀		25.7	50.1	16.5	6.9	0.9
축산물	한우	39.5	39.3	14.9	5.1	1.1
	돼지고기	20.3	47.7	25.2	5.9	0.9
과일		14.9	46.7	29.9	7.6	0.9
화훼		10.7	35.2	38.4	13.3	2.4

4.6. 식품 구매 시 채소 '안전성', 육류·곡물 '원산지' 중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식품 구매 및 외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파악한 결과, 채소는 '안전성'을 꼽은 의견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육류·곡물의 경우 '원산지' 및 '품질(맛)'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일과 외식의 경우 '품질(맛)'을 꼽은 의견이 각각 54.9%,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 분석결과 특정 연령대에서는 각 식품별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다르게 나타난 가운데, 채소의 경우 20대(32.4%)와 30대(32.5%)는 품질(맛)을, 40대(40.8%), 50대(39.2%), 60세 이상(38.5%)은 안전성을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곡물의 경우에는 20대(34.5%), 30대(34.7%), 40대(33.6%)는 원산지를, 50대(31.5%)와 60세 이상(35.7%)은 원산지를 더욱 많이 꼽았다.

표 13.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점(도시민)

단위: %

품 목	가격	안전성	품질(맛)	브랜드	원산지	영양
채 소	12.6	37.3	29.1	2.4	16.0	2.7
육 류	6.1	27.1	29.6	5.8	30.8	0.6
곡 물	8.7	22.7	29.4	7.1	30.9	1.3
과 일	5.7	18.9	54.9	4.9	13.3	2.3
수산물	5.1	26.5	32.0	4.0	29.2	3.3
외 식	14.4	17.1	46.5	10.1	4.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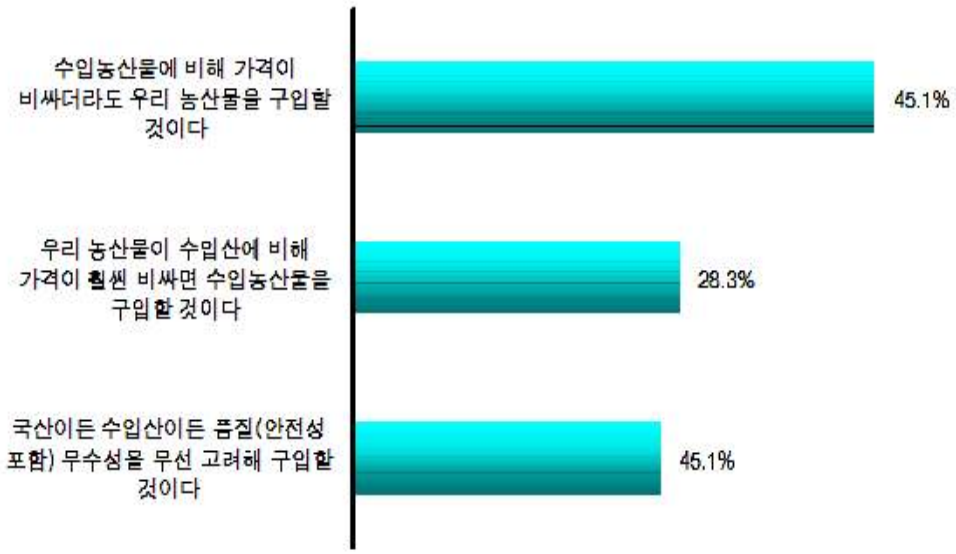
4.7. 도시민 45.1% “가격이 비싸도 국산농산물 사겠다”

농산물시장 확대 개방 시 농산물 구입 방식에 대해, 도시민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의견이 45.1%로 이들 소비자는 가격과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절대적인 지지는 2006년 본 조사결과(36%)보다 9.1%p 증가한 것이다.

반면, ‘우리 농산물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28.3%),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26.7%)는 유동층도 과반수가 넘는(55.0%)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의견은 서울(34.4%)지역과 전업주부(35.5%)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시장개방 확대 시 우리 농산물 구입 의향(도시민)



5.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노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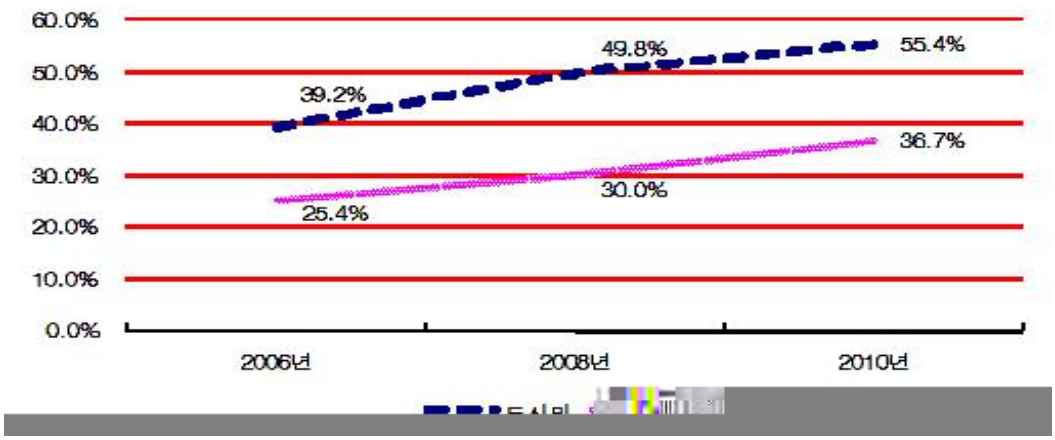
5.1. 거주환경 만족도 도시민-농업인 격차 18.7%로 확대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 도시민은 2006년 39.2%, 2008년 49.8%, 2010년 55.4%로 집계되었다.

농업인은 같은 기간 각 25.4%, 30%, 36.8%로 집계되었다. 양 그룹 모두 2009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그룹 간 인식차이는 커져 현 거주지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 격차는 2006년 13.8%p에서 2010년 18.7%p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2.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5.2. 삶의 질 만족도 농업인과 도시민 격차 14.3%p로 커져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조사에서 도시민은 2006년 14.8%, 2008년 19.3%, 2010년 26.9%로 나타났고, 농업인은 같

5.4. 농업인 18.6% '노후준비 없다'

농업인 중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2006년 조사결과(61.5%)보다 2.1%p 증가하였다. 자녀 및 가족들이 준비한다는 응답은 2%에 그쳤으며, 본인과 자녀가 같이 준비한다는 농업인은 11.4%로 조사되었다.

사회보장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6.6%) 아무런 준비도 없다(12%)는 취약계층이 18.6%로 조사되었다.

표 15.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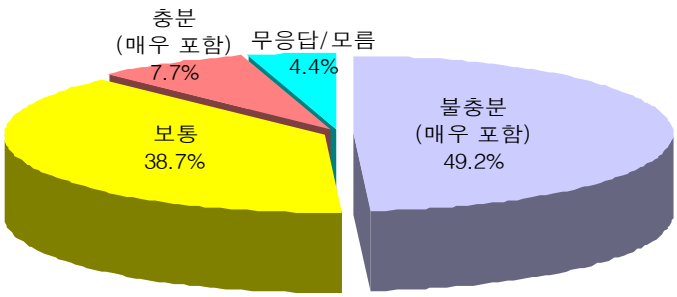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년	2010년
본인 스스로 마련	61.5	63.6
자녀 및 가족들이 준비	2.1	2.0
본인과 자녀, 가족들이 같이 준비	10.6	11.4
사회보장제도에 의존	7.9	6.6
아무런 준비도 기대도 없다	15.1	12.0
무응답/모름	2.9	4.4
합계	100.0	100.0

5.5. 농업인 노후대책 '충분한 편' 7.7% 그쳐

농업인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 수준은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또는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7.7%에 그쳤으며, 불충분(매우 또는 약간) 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9.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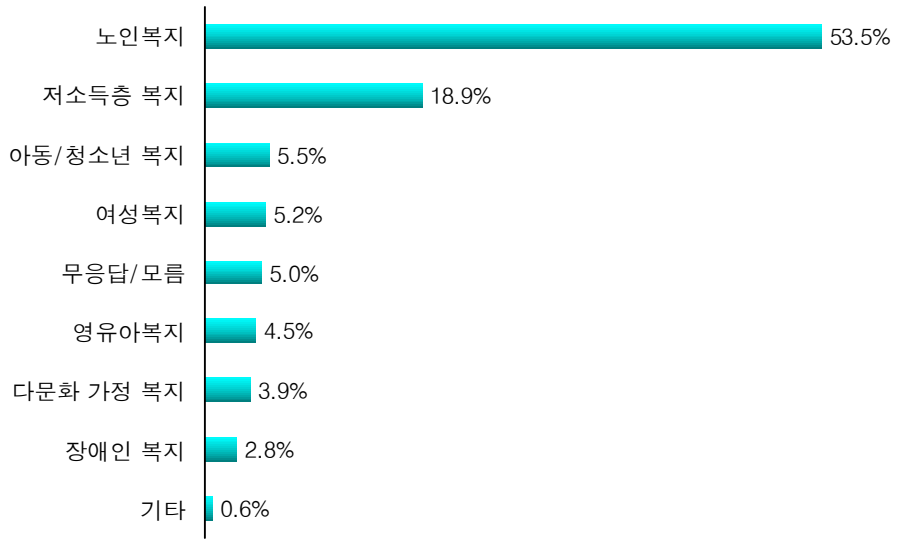
그림 14. 현재 노후대책 수준에 대한 인식



5.6. 농업인 가장 필요한 복지대책으로 53.5%가 '노인복지' 꼽아

농업인들은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복지분야로 과반수 이상(53.5%)이 '노인복지'를 꼽아 노령화된 농촌지역 여건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복지'(18.9%)를 꼽았다.

그림 15.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 분야 인식



6. 시사점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역할 인식이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도시민 40%만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3명(30.7%)만 농업정책에 관심있다고 응답하여 특히 취약계층으로 파악된 젊은층을 대상으로 관심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도시민이 55.9%로 최근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산비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올해 농사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해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격한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가가 91%로 이 중 30.3%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도', '농작물 재해보험 등 사후적인 위험관리' 등의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해결 노력에 대해서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다고 평가해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겠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대해 도시민과 전문가에 비해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 그룹이 필요성 인식이 낮았고, 미래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녹색성장과 농업의 관계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은 47.7%로 4년새 23.6%p나 감소하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실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어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 경제적 기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귀농·귀촌 촉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아무런 노후준비도 없다는 농업인이 18.6%로 조사되었고, 노후대책을 하고 있는 농업인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7.7%에 그쳐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귀농·귀촌 의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되고 있으나,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도시민과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소득안정 대책과 농촌사회 복지 확충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연구속보」발행 목록

2010년

제67권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제66권 주요국의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실태 (김창길, 김윤형, 정학균)
제65권 쇠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하반기 한우 가격 영향 분석 (허덕, 이형우, 이정민)
제64권 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과 통상 관련 검토 (송주호)

2009년

제63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제62권 2009년산 쌀 증산에 따른 가격 및 소득 분석 (김정호, 최익창)
제61권 식물공장의 동향과 전망 (김정호)
제60권 일본의 정권교체와 농정전망 (김태곤)
제59권 최근 산지 소값 동향과 쇠고기 가격 전망 (허덕, 이정민, 이형우)
제58권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57권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조영수, 박상미)
제56권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 (최경환)
제55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 (허덕, 이정민, 이형우)
제54권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 (김창길, 주현정)
제53권 국제곡물가격이 곡물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시차 (김태훈, 김배성)

2008년

제52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제51권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어명근)
제50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김진년)
제49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 (허덕, 이정민)
제48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양계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허덕, 우병준, 이형우)
제47권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덕, 김현중)
제46권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정은미, 정학균, 김수림, 윤선희)
제45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2007년

제44권 사육 여건 변화가 양돈소득에 미치는 영향 (허덕, 정민국, 김현중)
제43권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 수요 전망 (박기환, 송성환)
제42권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 (신용광, 황윤재)

제41권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김태영, 이상건)
제40권 최근 소값 동향 분석 (허덕, 송주호, 정민국, 이정민)
제39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제38권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임송수)
제37권 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제36권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김수석, 박석두)

2006년

제35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마상진)
제34권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임송수)
제33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제32권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김창길, 김태영)
제31권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제30권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최세균)

2005년

제29권 김치 안전성 파동과 김장 수요 전망 (송성환, 김연중)
제28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와 과제 (김영훈)
제27권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수확기 시장안정 대책 방향 (박동규)
제26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강창용, 고욱)
제25권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배성, 최정섭)
제24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김정호)
제23권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허주녕)
제22권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김동원, 박혜진)
제21권 친환경과실 소비 실태 및 전망 (김경필, 박미성)
제20권 독일과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김수석)
제19권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2005년 북한의 농정전망 (권태진)
제18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기회, 중국 (권오복)

2004년

제17권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
제16권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 (박동규)
제15권 2004년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김명환, 김혜영)
제14권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임송수)
제13권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김배성, 정학균)
제12권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 (김정호)

제11권 미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신승렬, 송주호, 김철민)

제10권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제9권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김정호)

제8권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김태곤, 정정길)

제7권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김태영)

제6권 최근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 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신승열, 송우진, 이형우)

2003년

제5권 수요처별 수입쌀 구매의향 전망 (이계임, 김민정)

제4권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박성재, 황의식)

제3권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 (김태곤)

제2권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임송수)

제1권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 (김명환)